

도-시군 제3회 부단체장 회의 개최

현안사항 협조 및 시군 건의사항 청취 등 논의 최병관 부지사, “바가지요금 근절 등 협조” 당부

전북특별자치도가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3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도 현안사항 협조 및 시·군 건의사항 청취 등 도-시·군 간 정책과 현안 사항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작

한 가격 업소 지정 확대 및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 등 체감불가 인하를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재정집행의 효과가 주민과 기업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재정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또한, 경기침체, 고물가 등에 따른 지역 민생의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

는 ‘다 함께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 수립·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18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의료계와 소통 강화, 정부의 대응방침에 따른 단계별 행정 절차 이행, 지역의료기관에 연차 진료 협조 요청 등 집단휴진에 대응한 적극적인 방안을 당부했다.

지난 12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기상청이 계기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전북에서 가장 강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이 가동되고 있다”면서, 각 시군에 산사태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러한 정부의 건전재정 기초 유지와 예년보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도 국가 예산 사업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지역 자생력을 높여 지역 유입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공모델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확산을 위해 행안부에서 공모 추진 중인 ‘2024년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에 시·군별로 적극 대응토록 요청했다.

이 밖에도 실용금융교육 전 시군 확대 추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운영, 주민의 조례 제·개정 청구 시 주민e직접 플랫폼 이용 홍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또는 도로, 하천, 공공시설 등 사업추진 전 농지 포함 시 농지분야·전용협의 등 사전 협의의 절차 이행 절차 준수, 도-시·군 전광판 교차 홍보 등을 시·군에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3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도, 올해도 풍성한 조사료 생산 기대

동계 조사료 재배면적 2만7000ha로 역대 최대 확보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 확보 위해 기계장비 추가 지원

전북자치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경감과 조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올해 동계 조사료 재배면적을 역대 최대로 확보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실시된 동계 조사료 파종조사 결과 재배면적이 2만7,000ha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1,000ha, 재작년보다 7,000ha 늘어난 수치로, 올해 파종이 예정된 하계 조사료 면적을 고려할 시 조사료 재배면적은 약 3만2,000ha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별 동계조사료 파종면적은 넓은 순으로 △정읍시 6,360ha △김제시 4,761ha △익산시 3,592ha △부안군 3,414 ha이고, 파종품종의 비율은 이탈리아 라이그라스가 2만4,579ha로 전체 동계조사료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호밀 1,303ha, 청보리 793ha 순으로 파종됐다.

이러한 재배면적 확대로 동계 조사료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만톤 이상 늘어 올해 41만톤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파종이 예

정돼 있는 하계 조사료의 추가분을 고려하면 생산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올해 확대한 조사료 재배면적의 생산을 위해 기계장비 지원예산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기계장비 구입에 26억원을 증액해 96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추가로 선정된 원주군 조사료 전문단지 3억원을 신규로 지원해 재배면적의 생산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조사료 재배면적의 확대는 축산농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유도해 경영안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조사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전주시 건설현장 안전점검

법적 필수 이행사항 교육

“안전관리에 관심 가져달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자치도는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을 필두로 지난 14일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제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적용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등 법적 필수 이행사항을 교육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전북자치도에서 중소사업장에 전문가 컨설팅, 중대 재해 예방 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6월 21일까지 적극적으로 참여 신청하기를 독려했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중 추락 및 깔림 사고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근로자들이 개인 보호구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부착설비에 체결하여 추락 예방대책을 세우고 대형 건설장비 사용시 신호수를 배치해 깔림사고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이어 여름철 폭염에 따른 열사병 예방을 위해 매일 교육을 실시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규칙적인 휴식시간 부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얼음물 상시 비치 등으로 폭염 대비에 대해 주문했다.

현장을 돌면서 안전관리자 지정 및 감독 상태,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착용 상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장치 설치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어떠한 것도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명심하고 사업 및 인·허가부서에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7월 3일까지 40명 모집... 지역인재 유출·육아휴직 활성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년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사업의 신규 참여 대상자를 7월 3일까지 모집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 위협 상황 속에서

지역인재 유출·이탈 방지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을 뽑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역 민생을

살리기 위해 지난 2월 김제 지평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방문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을 원하는 목소리를 들었고, 이를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20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에 재직 중인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 근로자이며, 지원 규모는 40명이다.

지원금액은 업무대행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월 30만원x5개월)을 지원하며, 업무대행자가 복수인 경우 최대 2명까지 인정하여 산정된 금액을 절반씩 지급한다.

신규 참여기업 모집 접수는 지난 14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t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여름철 호우대비 숲가꾸기, 벌채 사업장 긴급 정비

전북자치도가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피해에 대비해 산림 분야 긴급 정비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까지 산림 내 숲가꾸기, 벌채 사업장에 대한 긴급 정비에 나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숲 가꾸기 사업은 수목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도내 각 시·군은 지난해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이번 긴급 정비를 통해 각 시군 사업지를 대상으로 부산물 처리 실태와 임산물 운반로의 토사 유출 방지 등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견할 경우 응급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83명(△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23명 △

숲 가꾸기 패트롤 60명)과 산사태 현장 예방당 32명 등의 인력을 적극 활용해 과거 수해 발생 지역, 임도 배수로 정비, 계곡 및 산사태 위험지 주변 등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